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오 세 직

쌀 잉여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쌀 생산 조정제'라는 특단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의 취지는 그 동안 경작했던 논에다 벼를 심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자가 너무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기간을 연장해 놓고 쌀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관심조차 없는 눈치이다. 옛날에는 쌀이 모자라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밀가루 한 해 수입량 2천 5백억

쌀은 당연한 우리의 식량자원 중 으뜸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쌀 없이는 못사는 민족이다. 쌀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 듯도 싶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고작 쌀떡·쌀케익·쌀음료수 등이 대안 식품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도이다. 필자는 여기서 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바로 쌀라면의 개발이다. 라면은 우리의 대용식량 중 제1호를 차지하는 막대한 식품소재원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 라면 시장의 총 규모는 40억개로 매출액이 1조 2천억원에 달했다. 국민 모두가 1년에 1백개 정도 먹은 셈이다. 라면생산에 사용되는 밀가루의 양은 40만톤으로 생산

비가 2천5백억원에 달한다. 밀가루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고 볼 때 외화유출이 얼마나 엄청난 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라면의 생산은 쌀문제 해결 및 외화유출에 대한 중요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쌀, 보약 중 보약

쌀라면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쌀이 함유하는 무궁무진한 영양소에 있다. 우선, 쌀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의 약 3분의 1을 쌀을 포함한 곡류에서 섭취한다.

쌀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은 다른 곡류에 비해 함량은 적지만,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이 옥수수나 밀가루보다 두 배나 많다. 또, 쌀 단백질은 체내 이용률이 높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고, 쌀이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B등은 강력한 항산화(抗酸化)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방지에 큰 효과가 있다. 쌀은 고혈압을 낮추고 간기능을 높이고 암예방효과까지 있는 건강식품으로서 진짜 보약 중 보약이다.

몇 년 전부터 한 라면회사는 쌀라면을 개발해 시판하고 있다. 지금도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는 밀가루 라면에 익숙해 진 우리의 미각이 주요 원인이다. 수십 년간 밀가루라면에 익숙해진 지금의 입맛을 성급히 쌀라면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

도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과 함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쌀라면이 밀가루라면보다 두 배 정도나 비싸다는 점이다. 그럼 쌀라면의 대량판매는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이에 대해 필자는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다.

쌀라면으로 쌀문제 해결

밀가루라면을 쌀라면으로 대체하면 남아도는 쌀문제가 해결된다. 지금까지의 쌀라면은 맛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고 가격의 차이가 워낙 큰 한계점을 안고있어 성공할 수 없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쌀값은 갈수록 하락하고 밀가루 가격은 오르고 있다. 몇 년 뒤면 이들의 가격 격차는 더욱 더 좁아질 것이다. 더욱이 쌀라면의 원료는 자급자족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밀가루는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해 외화유출이 심각하다. 라면의 원료를 밀가루에서 쌀로 대체할 경우 쌀소비량은 38만톤으로 국내 쌀 생산량의 7.2%에 달한다. 이 경우 쌀의 잉여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농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문제도 해결되고 식량의 자급자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쌀라면에 대한 기술개발과 홍보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정부적인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쌀라면의 개발과 수요의 확대는 농업정책은 물론 외화유출문제를 고려할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 홍성신문 4월 28일자 |

內浦時代를 주목한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충남지역의 발전방향을 보면 대전을 중심으로 한 京釜軸이 있었다. 이 축을 중심으로 천안과 조치원 등 신흥도시로 발달하였고 대전권은 한 반도에서 가장 빠른 성장속도를 가져왔다. 이후 부여·공주 등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역사·문화사업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충남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백제, 금강, 계룡산 정도였다. 물론 서해안도 있으나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없어서 특화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전혀 그렇지 않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동안의 이런 고정 관념을 송두리채 바뀌놓고 말았다.

동북아시아 시대 주역, 내포

정부축 집중현상에서 서서히 西海岸軸으로 이동하면서 최근에는 한층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서해안은 환황해권지역의 핵심이자, 동북아시아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서해안 시대의 중심축은 다름 아닌 가야산일대를 지칭하는 내포권이 다. 내포지역을 한번 가보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드넓은 갯벌과 낙조가 아름다운 해

안, 그리고 수려한 평야와 나즈막한 산들은 우리 충청인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내포지역의 대명사이다.

예로부터 어염시수(魚鹽柴水)의 고장, 즉 물고기와 소금, 팥감과 물이 풍족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내포이며 자연의 보살핌과 베풀을 받은 선택된 곳이 내포이다. 이런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내포지역의 먹거리·볼거리·놀거리가 풍부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옛말에 "갯간에서 인심 난다"하지 않았는가!

바로 우리고장 충청, 그 중에서도 내포를 말함이 아닌가 싶다. 바다에서 얻어지는 각종 해산물과 땅에서 얻어지는 특산물들은 내포의 맛을 이루고, 그 맛은 내포만의 멋으로 이어지며, 내포의 인심은 이러한 맛과 멋에서 나온다.

내포문화권 본격 개발

이런 내포문화권이 본격 개발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에는 1조2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대부분의 사업이 정신문화창달사업, 문화유적 정비사업, 관광휴양공간 확충사업, 기반시설사업 등이다. 권역설정은 예산을 중심으로 서산과 홍성일부가 포함된 가야산권과 태안·서산중심의 해양권, 당진중심의 북부권, 홍성·예산중심의 내륙

권으로 나눠 개발된다. 바야흐로 내포시대를 알리는 서곡이다. 이 연구사업을 주도하게 될 충남발전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연구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내포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 '내포문화의 재조명'이란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관련 연구원들은 내포자료 수집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주민 적극 참여해야

내포문화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참여가 절실하다. 얼마 전 서산시와 태안군이 종합관광개발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내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살고, 살았던 분들의 고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총발원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포시대를 함께 열어가면서 후대에 길이 빛나는 내포역사를 창조해 나갔으면 한다. 내포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지역문화 교과서가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고도의 문치주의 사회를 운영해 온 문화민족이었다. 조선시대 왕조실록의 정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찍부터 역사와 문화의 정리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문화민족의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훌륭한 기록문화유산을 많이 남기고 있다. 조선후기에는 지방에서도 읍지(邑誌)와 지리지(地理誌)가 편찬되는 등 지역문화의 정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국가로서 1000년 이상 중앙집권 사회를 지향하여 왔기 때문에, 참된 의미의 지역문화가 정리되기는 힘들었다. 그 동안의 지역문화 정리는 중앙의 입장과 시각에서 논의되고 정리되어 왔다.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객이 주인행세를 해 왔던 것이다.

지역문화 정리 꼭 필요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어언 10여 년이 되어간다.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지역의 객관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필수요건이 된다. 특히,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와 정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문화교육

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지역문화 교육·교양서, 지역문화 안내·홍보서, 지역문화 특성 연구·자료집 등 지역문화를 탐구하고 소개하는 책자들을 간행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이미 『공주의 역사와 문화』(1995), 『삼포천의 역사문화』(1995), 『아름다운 금산』(1995), 『문화가 살아있는 이야기 공주』(1997), 『충남문화 기행지도』(1997) 등 지역문화 관련 서적들이 간행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책자를 내고 있다.

학교교육의 경우에도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의 3학년과 4학년 과정에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실정에 맞게 교과서를 편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에는 이미 시·군단위로 지역화 학습교재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교과에서도 현장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유산, 유적지 답사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경우 주로 사회·도덕 교과에 편성되어 입시에 대한 상대적 부담 때문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개 간단하게 지역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화학습이 미흡하다. 또한 마땅히 일할만한 교재가 개발되어 있지도 못하다.

지역문화 교과서 개발 시급

충청남도는 찬란했던 백제문화와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이 면면히 이어지면서 근·현대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국충절의 민족지사가 많이 배출된 고장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도민들에게 쉽게 알리는 지역역사문화 교과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각 시·군 별로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서가 하루빨리 발행돼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의 청소년들도 내 고장의 문화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날로 팽배해주고 있다. 이제 전문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은 하나의 당위에 해당한다.

이는 애항심과 고향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나아가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의 정신적 토대가 될 것이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지역의 향토사학자 차원을 넘어 대학의 저명한 교수님들도 지역문화에 대해 청신한 시각으로 심도 있는 탐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결집해 낼 수 있다면 지역문화 교과서의 마련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전문가 중심의 연구서가 아니라, 전체 지역민과 청소년에게 눈 높이를 맞춘 교양서 및 교과서의 간행이 시급하다.

| 충남도정신문 5월 27일자 |

심心하여 충남발전 앞당기자

근간 우리에게 당면한 지역현안들은 하나 같이 과거의 양상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남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제82회 전국 체전 종합우승의 쾌거와 함께 2002년 국제 안면도 꽃박람회 성공적 개최는 심대평충남지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충남인의 긍지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결정 및 행정수도 이전 현안을 둘러싸고 현재 복잡한 양상이 계속 나타나다가 하면, 특히 최근에는 계룡특례시 추진 및 당진항 분리 현안에 제동이 걸려 충남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이유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긴요한 지역현안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안팎에서 제동이 걸려 성사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하여 충남지역의 발전구도가 표류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계룡특례시 설치 현안을 통하여 우리지방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앙정치에 대하여 지방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실감하고 있다.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증평군 설치 문제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요즘 안보의식이 회복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 국방중추 계룡대에 대한 민간사회 쪽의 협력·지원노력이 크게 미흡하여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다. 또 얼마전 해양수산부는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해 당진항이라는 고유명칭 대신에 평택·당진항으로 공동명칭을 사용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부터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어떻게 하면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행정당국 혼자서 모든 일을 떠안고 책임질 수 없다. 뜻있는 지역주민들과 건설한 시민·사회단체의 협력, 그리고 학계·언론계·산업계는 물론, 특히 지방의원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상호간 협력·지원하고 해결과정에 동참하는 지역통합적 노력을 펼치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는 이것이 요즘 학계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는 「로컬 거버넌스(지역협력체제 모델)」를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자치행정론은 주민, 전문가집단,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패턴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참여행정이라 함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책임감을 갖고 진정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동참하면서 협조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작금의 현안문제 해결과정에서 지역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몇몇 소수인들만이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있음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국부적인 자기지역의 이해관계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길이라면 전 도민이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지역현안에 공동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

마찬가지로 당진항 분리지정 현안이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설정현안에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물론 민·관·산·학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의견을 조율하고, 대응논리를 가다듬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통합역량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논리는 설득력 있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져야 하겠다. 논리싸움에서 밀리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화시대는 경쟁의 시대다. 국가간 경쟁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역간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확고한 운영의 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충남의 발전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하겠다. 아울러 전 도민 모두가 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책임감을 갖고 합심하면서 충청인의 근본바탕인 인간미, 여유, 양보, 포용력, 예의범절을 계속 살리면서, 동시에 새 시대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소신, 결단, 협력, 추진력을 충실히 배양해야 한다.

앞으로 거듭 요청되는 것은 도민 개개인이 소아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살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앞장서야만 충남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